

尹 “총 쏠 수는 없나”… 경호차장 “네 알겠습니다”

경찰, 진술 확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오찬서 물어
尹측 “총기사용 검토 지시 안해… 경계근무 강화”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2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관계자에게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또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총이나 실탄을 옮겨둔 것은 아니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 ‘정점’인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이를 반

려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즉각 석방됐고 이후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비화론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론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를 불법으로 여겨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게 특별수사단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비화론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질문 역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검토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경호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경호처·안가 CCTV 압수수색 불발

집행 불능사유서 받고
4시간 현장 대기하다 철수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와 안전가옥에 대해 20일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다시 막아섰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 종로구 삼정동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4시간여 동안 현장 대기하다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경호처로부터 집행 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며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가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호처에는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다.

경찰은 “삼정동 안전가옥 내부와 외부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며 “안가 내부에 있는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드나든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출입한 이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가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이다.

조청장과 김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고,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안가에 모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당초 대통령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실에는 경호처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 혐의를 위해 수사관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달 27일 집행하지 못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번 발부반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줄줄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설명이다.

경호처는 당시 형사소송법(110조·111조)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尹, 오늘 탄핵심판 나올까… “곧 출석할 것”

김용현 23일 증인신문 출석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발원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심리에 참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윤 대통령이 만약 출석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심판정 내에서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경호 혐조 요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1일로 예정된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2차 변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탓에

신변 안전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영장이 집행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출석을 거부할 이유가 상당수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곧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23일 4차 변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현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청장 측은 건강 문제와 증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